

차세대 성장동력 8개 현안 묶여

‘진통중’



글_ 박중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jg@kiet.re.kr

21세기 들어 한국경제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선진국으로 도약을 앞둔 기로에 있다. 이렇게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한 단계 제고시키고 대내외 환경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다지기 위해서 2003년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발굴하고 진흥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적인 역량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정책 중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지난 2003년,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굴 및 육성계획’은 그 동안 부처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형성 단계, 핵심기술 등을 감안하여 산업별 주관부처를 선정하고, 주관부처는 협조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 추진계획을 작성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내에서 부처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위 조정기구인 ‘차세대 성장동력추진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발굴된 분야가 ‘과학인가 산업인가’ 논란

그러나 이같이 결정된 이후에도 좀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8가지 현안 과제에 대하여 산·학(연)·관 간 합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첫째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굴되는 분야가 과학기술인가, 아니면 산업인가”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인가 산업인가에 따라서 연구개발 분야, 산업화 노력, 그리고 참여 주체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현안 과제는 차세대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는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동 분야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스펙트럼상에서 최첨단분야로 정하느냐, 아니면 한국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축적된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산업구조를 배경으로 융합화, 연계화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심화, 세계적 분업추세에 대한 대응, 세계적 위치에 걸맞은 위치 확보 등이 가능한 분야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산·학·연 주체간 연계보다는 갈등까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학·연에서는 과학기술로 간주하려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기업에서는 산업으로 구분하려 하고 있다.

WTO·통상마찰 초래 우려도

두 번째 현안 과제는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유망한 기술이나 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배치될 수 있는 타계팅전략인가, 아니면 선진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통상 추진하는 산업발전 비전의 제시인가”하는 논의이다. 통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학·연·관의 전문가들은 주로

연일포토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정부위원들과 학계 교수들이 이뤄진 민간위원들이 제1회 차세대 성장동력 특별위원회를 열고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WTO나 국가간 통상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 산업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후발개도국도 정부차원에서 서두르고 있는 경쟁력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안 과제는 정부의 차세대성장동력 추진정책이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하부구조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문제가 감소될 수 있다.

셋째는 “10대 전략산업으로 발굴된 분야들이 대기업형 분야이지, 중소기업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하는 불만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는 10대 전략산업내에 세부적으로 100대 과제로 분류되어 있으며, 세부 과제별로 기술능력 보유기업과 대학, 연구소간에 양자 혹은 다자간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에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도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소·벤처기업간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에서 전략적 협력문화가 미흡하다는 모순도 드러내고 있다.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이 국내외 대기업과 협력하여 진입장벽을 극복하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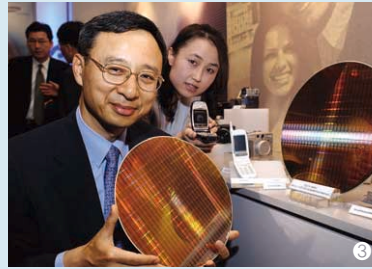
네 번째 현안 과제는 “이미 부처간에 합의된 분야에 대해 업무조정 이 원활한지, 아니면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독자적으로 추진되면서 국가자원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계속될 것인지 주목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굴된 분야에 대해 효과적인 과학기술분야의 선택과 선택된 과학기술의 개발과 산업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더 나아가 주관부처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기반형 거시재정·금융정책, 환경·규제정책, 시장활성화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정책 등이 상호연계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실제로 1990년대 미국에서는 위 정책간 연계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신경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거시금융정책도 물가안정이라는 주목적 이외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차적 목표를 분명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정부부처의 정책간 연계가 이루어질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국내 연구개발체계의 정밀분석 요구

여섯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및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주계약자(Prime contractor) 선정 후 세부과제에 대해 사업수탁자를 지정하는 방식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주계약자 방식에서 탈피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탐색 및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동관심을 가진 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컨소시엄간 경쟁유도 방식을 연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는 위 두 방식의 장단점, 우리 나라 연구개발체제의 역사적 진행과정과 과제, 연구개발체제의 전환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추진과정에서 편의성과 효과성, 효율성 등이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및 기술을 개발 및 산업화하는데 있어서 현재와 같은 학·연 주도형(기업 협력형)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산 주도형(학·연 협력형)체제를 연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진흥하는데 있어 산·학·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데 비해, 이러한 협력체제의 성과나 문제점, 그리고 각 주체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이

진행될 경우 지금까지의 체제와 구별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세계 연구개발에서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연구개발에서 시장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산업계가 기획을 주도하고 기획된 연구개발주제에 대해 학·연이 참여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연계지원하는 협동체제를 병행발전시키고 있다.

여덟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현재와 같이 과학·기술개발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연계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현재까지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 및 진흥계획은 지금까지 국가 중대형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과학기술 연구개발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연 연구개발하면 산업화는 자동적이며,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산업화 가능분야가 도출될 경우 유연하게 연구개발 결과의 거래, 알선, 이전, 더 나아가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할 경우

차세대 성장동력 과제와 부처 분담표

주관부처	소관산업명	협조부처	선정이유
과학기술부	바이오장기/신약	산자, 농림, 복지	기초 원천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이 중요하고 위험도가 높은 산업
산업자원부	디스플레이	과기	전통산업 연관효과가 높은 산업
	차세대반도체	과기, 정통	
	차세대전지	과기	
	미래형자동차	과기, 건교	
정보통신부	지능형 로봇	과기, 정통	네트워크, 표준화, 서비스 허가정책 등이 핵심적인 산업
	디지털TV/방송	과기, 산자	
	차세대이동통신	과기, 산자	
	지능형 홈네트워크	과기, 산자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과기, 산자, 문광, 건교, 해양	



- ① 바이오장기/신약 ② 디스플레이
- ③ 차세대반도체 ④ 차세대전지
- ⑤ 미래형자동차 ⑥ 지능형 로봇
- ⑦ 디지털TV/방송 ⑧ 차세대이동통신
- ⑨ 지능형 홈네트워크
- ⑩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기술저장소 역할을 수행하거나 매우 새로운 과학기술일 경우 스스로 산업화가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와 같은 논쟁거리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고 일단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이 연료전지산업의 비전에 대한 합의를 모으고 10년 동안 마찰없이 추진하여 산업의 동력원을 교체하면서 경쟁력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국민적 합의도출이 마지막 과제

1990년대 후반 이후 성장잠재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 및 산업구조의 전환기에 위치해 있는 한국경제가 선제적이면서 종합적인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산·학·연·관이 지혜를 모아 차세대 성장동력을 제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

행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아있는 중요한 일은 이러한 계획을 국민적 합의에 부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차제에 여러 갈래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정과제들을 종합·연계시켜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많은 국정과제들로 열키설키 꼬여있는 실타래를 꿰뚫을 수 있는 하나의 핵심단어가 필요하다. 융합이나 디지털 접목 등이 식상한 표현인 것 같지만, 실상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정확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다시 제기해 보는 것을 어떨까. ⑪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장기신용은행 산업금융 1부 심사역, 산업연구원 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항공기, 산업정책, 동향분석 실장, 산업자원부 장관 자문관을 역임했다.